

## 공동관리는 大學自律을 해친다

丁 大 鉉

(梨花女大 哲學科)

### 1

한국 대학사회에서 博士學位論文審査에 얽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논문제출자가 처음부터 지도교수보다 그 분야에서의 지식이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흔히 듣는 것이다. 정확하게 하자면 이것을 거꾸로 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심사위원도 다른 사람 아닌 제출자 당사자가 추천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지도교수와 친분관계에 있는 학자들이 심사를 맡게 된다. 심사에 까다로운 사람은 다음 기회에서 탈락되는 것이 관습처럼 된 학교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박사학위 심사를 마치고 유효한 경우가 드문 것은 심사과정에서 제출자를 위한 敎育의 考慮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

학사회에서 예능계 입시부정과 같은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한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李敦熙 교수의 글은 시의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2

이 글에서 논자는 學位共同管理制를 제안한다. 논자의 논의는 다음의 네 가지 명제로써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학위란 명예롭고 귀위하고 권위가 지켜져야 한다. 학위수여 관리는 대학 자율적인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학위의 대량생산이라는 최근의 현상을 볼 때, 단지 대학 구성원의 책무 의식에만 호소한다고 해서 학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학 자율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이 가능한데 이것은 합리적 행위의 과정을

관습화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학위수여는 공동관리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논의는 초견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당위성 명제는 분석판단적 논리성을 갖는다. 누가 학위의 권위를 지키자는 데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두번째의 자율성 명제도 자명하다. 대학의 지금과 같은 전통적 개념이 주어진다면 그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은 모순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의 불신 명제는 논자가 매우 조심스럽게 개진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설득력을 갖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명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번째의 동일성 명제, 즉 ‘대학의 자율이 손상되지 않는 특정한 방식=합리적 행위의 과정을 관습화하는 특정한 제도’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력은 [이 논의를 음미할수록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첫째, 당위성 명제가 지키고자 하는 학위의 權威란 논자 스스로 인정하는 '전통적 학위관'에 입각한 학위의 권위이다. 그러나 논자의 전통적 학위관이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그에 대조되는 그리하여 배격되어야 하는 현실적 학위관은 무엇인지 아무런 시사도 없다. 둘째, 자율성 명제는 논자가 이야기하는 동일성 명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면 그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의문스럽다. 셋째, 얼마나 많아 야 너무 많은 것인가? 어느 정도의 수에서부터 우리는 大量生産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이 그러한 단계의 수준인가? 이를 위해 어떤 표준이 있을 수 있는가? 넷째, 논자는 동일성 명제에서 탈립마에 빠진다. 한편으로 논자가 '합리적 행위를 관습화하는 제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동안 동일성 명제는 유지될 수 있지만 공허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논자가 여기에서처럼 그 제도를 학위 수여의 公認制와 기관제의 병행제도에서 제안하는 경우 그 합리성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인가는 분명해지지만 동일성 명제의 개연성은 금방 위태로워진다. 병행제도는 논자의 진단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열려하던 불신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학위의 권위가 지켜지는 것

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논자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여는 동일성 명제의 제시라고 생각한다. 그의 동일성 명제의 해석이 병행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문제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논자의 동일성 명제는 설득력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평자는 이하에서 동일성 명제를 유지할 수 있는 代案의 解釋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박사학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대학의 자율성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3

현대사회에서 박사학위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를 위하여 먼저學位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權威와 名譽와 稀少性이 박사학위에 대한 전통적 이해의 구성요소일 것이다. 세 가지 요소는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이해의 구조를 실현한 박사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사후적인 규정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 박사학위 제도의 유지의 근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가설로서 고려하겠다. 하나는 지식사회학적인 것이다. 과거, 즉 20세기 이전은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情報의 大量化가 없었고

情報의 民主化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의 구조와 박사학위의 전통적 이해는 서로 맞물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의 가설은 2세대적인 것이다. 학위수여를 그 학자의 활동의 시작에서 부여하지 않고 후반부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평가의 자료가 많을 뿐 아니라 객관적일 수 있고 판단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권위, 희소성 그리고 명예가 된다. 독일 대학에서 학위논문의 출판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입장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박사학위에 대한 현실적 이해는 어떠한가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학위의 起源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과거의 어깨 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학위는 아랍 문화권에서 859년에 수여된 것 (ijazah)으로 이것 없이는 가르칠 수 없었다. 파리대학은 1150년에 '박사'라는 칭호를 수여하기 시작하였고, 이것 또한 敎職에 있어서의 학문적·도덕적 적합성을 보이는 증서였다. 미국에서는 예일대학이 1861년 최초의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존스 홉킨스대학이 독일의 제도를 모방하여 대학원대학교로 시작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프랑스는 대학교수 자격을 부여하는 公認박사와 전문적 교육의 이수를 나타내는 大學박사를 구분하였다. 하바드대학은 이러한 구별을 받아들여 예

느 분야이건 간에 창의적 연구 능력을 나타내면 학위를 수여하는 철학박사(Ph.D.)제를 유지하고 1920년에 전문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분야의 박사제, 예를 들면 교육학박사, 임상심리박사, 체육교육박사 등을 두었다.

박사학위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사항은 학위라는 것이 교적이거나 다른 專門職과 관련하여 수여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학위가 機能的이었다는 것이다. 권위, 희소성, 명예와 같은 박사학위 칭호가 갖는 특성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학위수여의 의도는 기능적이었고 정적인 또는 사회심리적 기준을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현상은 올바른 것이긴 하지만 목표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올바른 목표의 성취에서 결과되는 수반적 현상이었다.

현대사회를 산업사회나 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박사학위의 개념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독립적인 研究能力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 학자의 생애의 시작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위관이 정적이라면 이것은 기능적이라고 할 것이다. 專門家 社會가 동료로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에서 영입을 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학위관에 대하여 논자는 올바른 염려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 학위관에 의한 학위수여는 전통적 학위관의 그

것에 비하여 평가자료가 부족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오류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평생 동안 자신의 학위논문보다 더 나은 업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언지는 '학위수여가 학자의 생애의 시작에서인가 아니면 후반에서인가'가 아니라 '30대 전후에 수여되는 학위수여가 정적이거나 하는가 아니면 기능적이거나 하는가'이다.

#### 4

논자는 학위의 質 관리에 있어서 대학의 自律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하나는 官權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성 명제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논자의 합리성제도는 병행제도였고, 이것은 질 관리를 위해서나 대학의 자율을 위해서나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공인박사가 도와서 세운 박사의 權威는 기관박사가 내리쬐울 것이고, 대학의 권위와 자율 밖에 있는 공인박사는 또한 대학의 自矜性을 허물 것이기 때문이다. 병행제도는 동일성 명제를 거짓이게 한다.

大學의 權威와 自律은 지금과 같은 논의의 문맥에서는 대학이 수여하는 박사학위에 대하여 최종의 말을 하는 데서 찾아진다. 이는 공동관리제에 대한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한 대학생이 식단이나 의복 또는 논문제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최종의 말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의 말을 친구들의 모임이 선언한다고 하여 보자. 우리는 그 학생의 자율성이나 존엄을 의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위수여의 共同管理制는 근본적으로 대학 자율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동관리제는 학위 質의 수준을 고르게 유지하여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관리는 '다원성 존중'의 정신과는 다른 방향의 시각에 설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학들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분야에 따라 또는 캠퍼스에 따라 學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아직 미미한 상황에서 중앙관리는 그 가능성의 싹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자. 1대학의 사학과는 실증사학을 하고 2대학 사학과는 민족사학이라고 하자. 여기서 공동관리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두 대학의 논문들이 공동관리제에 맞추어 쓰여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고, 그 학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학위논문을 평생 옹호하게 될 것이다. 미미한 학풍마저 없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의 自律은 그것이 사회에 대하여 갖는 상징성 때문에

라도 지켜져야 한다. 개인을 원자적으로 파악하건 사회연대적으로 이해하건 간에 현대인들은 다양한 구조들과 기대한 세력들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를 실감하게 된다. 사회의 많은 단체들도 비슷한 이유에서 그러한 연약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학은 의연한 자율성과 분명한 개성을 지닌 하나의 개별자로서 단체들이나 개인에게 귀감이 된다.

물론 한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직 귀감의 대상이 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위논문제에 대한 공동관리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인가는 의문스럽다. 물론 논자는 공동관리제를 잠정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양보 속에 들어 있는 자율성의 우선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 5

여기에서 고려한 현실적 학위관과 대학 자율성은 논자의 동일성 명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

이다. 평가가 동일성 명제는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병행제적 공동관리제도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의 핵심은 학위논문의 공동관리적 심사에 있다. 그러나 이는 논자의 동일성 명제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일성 명제의 한 예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행위의 과정을 관습화하는 특정한 제도’를 향하여 우리는 몇 가지 고려로써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학위관이 학자의 생애 초기에 독립적 연구 능력에 따라 박사학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학자의 생애 후반기에 그 업적이 평가되고 인정되는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위 명칭은 ‘존사’ 또는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학회 또는 학술원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고려는 敎職 학위와 專門職 학위를 구별하여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프랑스도 미국처럼 이러한 구별 체제에 의해 중앙통제 체제에서 대학의 자율체제로 옮겨간다고 한다. 의학분야의 경우에

의사시험 합격자는 의학박사라는 전문직 학위를 수여하고 연구직 학위로써만 철학박사 또는 과학박사를 수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학이나 이학,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도 교직 학위와 전문직 학위를 구별하고 교과과정부터 달리 시행하도록 대학에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관리제에 의한 직접적인 논문심사보다는 심사장치의 엄밀성과 개방성을 지키도록 돕고, 그리하여 관련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도교수, 지도위원회, 심사위원회, 평가서, 논문 등이 어느 구석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학문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공과와 업적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역은 보호되어야 할 私的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근접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들은 동일성 명제의 개연성을 위한 출발일 뿐이다. 보다 상세한 검토들에 의하여 이 명제의 당위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